

일본의 정권전략 : 민주당 대표선거전의 주요 쟁점과 자민·공명 양당의 전략

8월 29일 예정된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일본 민주당 대표선거전이 7과전을 양상을 띄면서 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자간 주요 정치/정책 쟁점에 관한 입장과 견해, 그리고 민주당과의 대연립 등 협력방법을 놓고 부심하고 있는 야당의 전략 모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일본의 정국과 정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일본 민주당 대표선거가 오는 8월 29일로 결정됨에 따라 여러 쟁점을 둘러싸고 후보자들간 정치·정책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는 한편, 야당인 자민·공명 양당도 대연립 등 민주당과의 협력방법을 놓고 부심하고 있음.
- 앞으로 29일 대표경선, 30일 총리 선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 등 7명의 후보가 대결할 것

□ 민주당 대표선거전의 주요 정치·정책 쟁점

- 이달 29일 예정된 간나오토 수상의 후임을 뽑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는 자민당이나 공명당과의 연립에 대한 찬반, 메니페스토(정권공약)수정 여부에 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임. 이외에 중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에너지정책이나 경제정책도 중요한 테마이나 상기 두 가지 쟁점 속으로 묻혀버릴 가능성이 큼.
- 7명의 예상후보자중 대연립 논의의 도화선에 불을 당긴 후보가

바로 노다 재무상임. 마에하라 전 외상도 1년 정도 연립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간 정권을 뒷받침해온 소위 주류파 인사들은 대 연립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후보자별 정치·정책적 입장과 견해 >

후보자	대연립	매니페스토 수정	에너지전략	성장전략·산업정책
오자와사키히토 (小沢鋭仁)전 환경상	대연립에 의해 비 판세력이 없어지 는 것은 민주주의 의 최대 위기(X)	이념은 계속 유 지해야 하나 현 실적인 수정은 필요(△)	원자력발전은 단 계적으로 줄여나 가야, 재생가능한 에너지나 에너지 절약촉진을 위한 사회자본정비 추 진	정부와 일본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설 정, 디플레로부터 벗 어나야
가이에다반리 (海江田万里) 경산상	야당과 타협수준을 밝는 것이 중요 (△)	유감스러운 일임 (△)	현재로는 원자력 발전에 의한 에 너지의 안정적공 급은 불가피, 장 래 원자력발전에 의 의존도를 낮 추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	FTA의 강화·확충 이 필요
가노미치히코 (鹿野道彦) 농상	언급할 단계가 아 님(△)	민·자·공 3당이 합 의한 것이기 때문 에 정책의 효과 를 철저히 검증해야 함(△)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이나 재생가 능한 에너지에도 대처	6차산업화에 대한 대처가 농어촌활성 화의 요체
다루토코신지 (樽床伸二) 전 국회대책위원장	기한을 두고 대연 립은 필요(○)	아동수당은 여야 가 서로 양보한 것을 가지고 각 각 판단해야(-)	탈 원 자 력 발 전 은 중장기 과제이며 우선은 축전지보 급부터	디플레와 엔고는 상 관관계에 있는 만큼 1%정도의 물가상승 율을 적정수준을 잡 고 경제를 운영해야
노다요시히코 (野田佳彦) 재무상	대연립을 염두에 두고 있음(○)	과거 말한 것에 구애되어서는 여 야간 협의가 불 가(○)	안정성을 확보하 면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가동 시켜야, 신규 원 자력발전소 건설 은 어려움	환경·에너지·건강·의료 분야에서 신산업을 육성, 성장하는 아시 아시장을 활용해야
마에하라세이지 (前原誠司)전 외상	1년정도의 대연립 은 필요(○)	매니페스토를 충 괄, 반성도 포함 하여 철저히 해 야(○)	자연적으로 해체 되기까지는 40년 소요, 그대까지는 원자력발전에 의 존하면서 대체에 너지를 확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 은 성장의 방법과 성장과실의 분배에 두어야
마부치스미오 (馬淵澄夫) 전 국토교통상	대연립, 결정된 것 은 아님(△)	환경이 바뀌면 수정이 불가피 (○)	원 자 력 발 전 의 존 도를 낮춤과 동 시에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자 치체의 양해를 얻어 가동	앞으로 3년간 지속적 인 금융완화에 의해 디플레로부터 탈피, 양적완화를 통 해 엔고를 억제

○ : 전향적, 용인 △: 신중, × : 반대, - : 언급하지 않음

- 한편, 민주당내 하토야마유키오 전 수상은 최근 노다 재무상과의 회동에서 대연립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함. 후쿠다 정권당시 당대표로서 자민당과의 대연립을 획책한 오자와 전 대표도 지금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음.
- 마부치 전 국토교통상이나 오자와 사키히토 전 환경상, 오자와 전 대표와 하토야마 전수상의 지원을 기대하는 후보들은 하나같이 대연립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노다씨도 20일 하토야마씨와의 회동에서는 「선택지의 하나」라는 견해를 보였음.
- 메니페스토 수정에 반대의사를 명백히 밝힌 후보는 현재로서는 없음. 노다 재무상, 마에하라 전 외상은 메니페스토 수정에 매우 적극적임. 오자와 하토야마 양 그룹의 지원을 기대하는 오자와사키히토, 가이에다 경산상은 재원문제의 고려 등 정책검증을 포함하여 당내 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 반대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것은 오자와 전 대표가 「메니페스토상의 개별정책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이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개별정책의 수정도 불사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에너지문제에서는 어떤 후보도 원자력발전의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을 활용할 수 밖에 없을 시사하고 있음. 만일 脫원자력 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경우 후일 이것이 자기들의 수족을 잡아맬지도 모르기 때문임.
- 정지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보조를 맞추고 있음.

-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오자와 전 환경상, 타루토코 전 국대위원장, 마부치 전 국토교통상 등이 물가안정 목표 설정이나 양적 완화를 내걸고 있는 외에는 기존 정부방침의 범위내에 머물고 있음. 급격한 엔高 진행으로 경제계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성장전략이나 산업정책 등 중요한 경제정책에 관한 논의수준은 깊지 않은 편임.

□ 자민·공명 양당, 민주당과의 대연립에 소극적, 각외협력 검토

- 자민, 공명 양당은 간나오토 수상 퇴진후 후임 민주당 신대표와의 협력방법 모색에 나서게 되는 데, 「포스트 간」의 유력 후보의 한 사람인 노다 재무상이 제창하는 대연립에 소극적이고, 지진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을 중심으로 「각외협력」을 축으로 검토하고 있음.
- 「부흥이나 3차 보정예산 등 과제마다 협력하는 것이라면 현재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민당의 이시바(石破茂) 정조회장은 16일 노다 재무상이 제창한 대연립구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
- 노다 재무상은 참의원에서 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소위 「역전국회」로부터 돌파구를 열고자 하는 의도로 자민·공명 양당과의 대연립 구상을 들고 나왔는데, 자민당내에서도 각료유경험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호응함.
- 그러나 입각하게 되면 민주당정권이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 외교나 경제재정 운영면에서도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바, 자민·공명 양당 집행부에는 「정권내 혼란 상태에서 책임만 지게될 뿐」이라고 소극론이 많음.

< 여야간 정권협력의 종류 >

정권에의 협력정도 ↑ 높음 ↓ 낮음	연립	-여당과 정책협정을 맺어 당원들을 각료에 참여시킴 -각의 결정에 참가하기 때문에 정권운영에 책임을 짐
	각외협력	-정책협력을 맺으나 각료에 참여시키지 않고 예산이나 법안 심의 등에 폭넓게 협력
	부분연합	-특정 분야에서 정책협정 등을 맺어 부분적으로 협력

□ 대연립은 「예외중의 예외」

- 연립협약에도 시간이 걸림. 2009년 9월 출범한 하토야마정권에서는 사민당, 국민신당 양당의 연립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1주일이 소요되었으나, 주요 정책분야에서 대결해 온 자민·공명 양당과의 협의가 한층 지연될 것임은 틀림없음.
- 오카다(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신대표 선출 후 연립협약이 필요하다면 9월 임시국회를 열어 수상 지명선거를 실시하는 안을 언급했으나 자민·공명 양당은 3차 보정예산 편성이 늦어질 뿐이라고 냉정한 반응을 보임.
- 대연립에 전향적인 오시마(大島理森) 자민당 부총재는 복구·부흥에 한정, 기간도 정하자는 주장, 이시하라(石原伸晃) 자민당 간사장도 해산시기에 관한 확약을 조건으로 내걸음. 그렇다 하더라도 낙선의원들을 안고 있는 파벌회장들은 조기 중의원 해산·총선거 실시를 요구하면서 대연립에 부정적임.
- 중견·초선의원들도 연립후 중의원 선거에서 쟁점을 찾기 어렵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다니가키(谷垣禎一)자민당 총재는 대연립을 「예외중의 예외」로 하고 「각외협력이 기본」이라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음.

- 각외의 경우에도, 포괄적인 정책협정을 수반하는 「각외협력」과 개별 정책테마에 한정된 「부분연합」이 있음. 각외협력은 각료를 참여시키지 않으나 여당으로서 법안이나 예산편성·성립에 협력함. 1996년 11월 발족한 제 2차 하시모토 내각에서는 연립을 시도했던 사민당과 신당 사키가케가 각외 협력 쪽으로 선회한 바 있음.

□ 도중하차식의 자민당 정권전략

- 자민당내에는 3차 보정예산에서부터 각외협력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소리도 있으나, 민주당 메니페스트가 남아있는 가운데 포괄적인 정책협정은 곤란하다는 신중론이 많음.
- 지진재해복구·부흥협력을 위한 3차 보정예산 등에만 한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부분연합임. 적자국채 발행법안 성립에 민주·자민·공명 3당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만으로는 자민·공명 양당 집행부내에 저항도 적지 않음.
- 그러나 신정권이 복구·부흥 관련으로 어려움에 빠질 우려가 적어, 중의원 해산이 멀어질 가능성도 있음. 한 자민당 간부는 자민당 정권전략이 중도하차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침.

□ 전망

- 현재로서는 일본 민주당 대표선거가 7파전 양상을 띄고 난전이 예상되지만 이중 마에하라 전 외상과 노다 재무상간의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외무상에서 사임한 바 있고 한때 불출마선언했지만 총리후보로 일본인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마에하라 전 외상이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

의사를 시사하면서 선거전 최대 변수로 떠오름.

- 노다 재무상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중심으로한 민주당 집권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지만 증세론자로서 당내 마에하라 계파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수적인 면에서 불리해진 상태임.
- 그러나 이들 후보중 누가 대표로 선출되느냐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앞으로 일본의 정국과 정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
- 정국면에서 자민당·공명당과의 대연립이 실패하는 경우 자민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한 현상 상황에서 차기 수상이 중의원 총해산 및 총선거에 내몰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연립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조건이나 범위 여하에 따라 풀어야 할 정책적 난제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임.

< 참고자료 >

日本經濟新聞(2011.8.22)외